

DJ 노믹스의 비판적 검토

강병구

인하대 강사 경제학

김대중 정부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밝힌 홍보용 책자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를
발간하여 「국민의 정부」의
경제철학과 개혁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희망과
경제현실은 큰 차이가 있으며,
국민들의 경제체감 지수는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DJ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1. 머리말

최근 김대중 정부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밝힌 홍보용 책자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를 발간하여 「국민의 정부」의 경제철학과 개혁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발간 사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김대중 정부는 과감한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힘'을 강화하며,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가 샘솟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경유착구도와 관치금융의 판행, 부실경영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현재의 위기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면서 정부와 공공부문, 기업과 금융, 노동 등 각 주체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통을 골고루 분담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거의 전적으로 근로대중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근래 우리의 현실이자, 국민의 정부가 선택한 정책의 결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거의 전적으로 근로대중에게 선기되고 있는 것이 근래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의 정부가 선택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기도 하다. 부실기업의 퇴출과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정부의 지원금, 재벌기업간의 소위 빅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탕감,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실업사태, 실질임금의 하락 따위는 고통의 공평한 분담이라기보다는 근로대중에게 고통을 상대적으로 집중시키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에서 정부지출의 형태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부실채권정리(32.5조원), 예금대지급(14조원), 은행융자(19조원) 등 금융조정비용이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약 77조원, 기업구조조정비용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대기업간의 빅딜 과정에서 발생할 부채탕감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실업대책 기금을 고려하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한편 정부통계에 의한 실업률은 8월 들어 7.4%로 실업자는 158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18시간 미만의 실질 실업자는 220만 명으로 추산되어,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실업률 수준 1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98년 상반기 기준으로 임금총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0.5% 감소했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 8.6%를 감안할 때 실질임금은 8.4% 하락으로 기록된다.

이 글은 소위 DJ 노믹스를 근간으로 하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이면에 있는 경제철학의 분석을 통하여, DJ 노믹스는 「국민의 정부」를 위한 경제 청사진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불모로 차본의 측면조건을 대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려 한다.

따라서 2절에서는 DJ 노믹스의 탄생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DJ 노믹스의 주요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4절에서는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략히 언급 한다.

2. DJ 노믹스의 탄생배경 및 내용

소위 DJ 노믹스는 1997년 말 외환 및 금융위기로 촉발된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위기관리와 극복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말에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금융자본의 활동무대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었다. 1997년 가을부터의 경제난국과 금융위기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경기 침체와 국제투기자본의 전략적 투자행위로 촉발되었지만, 이와 같은 외부 충격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온 경제구조의 총체적 부실(정경유착과 재벌구조)이라는 대내적 요인에 의해 그 부정적 효과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났다.

DJ 노믹스에 의하면 “오늘의 경제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기업 및 금융부실의 표

출에 따른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금융감독의 소홀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0여년간 압축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었고,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환경변화에 대처하

기 위한 개혁정책이 리더십과 실천력 부족으로 번번히 실패한데 있다”¹⁾라고 진단한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정부, 금융, 기업, 노동, 해외부문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이를 통해 정부부문의 몸집을 줄인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통제중심의 예산체제를 결과중심으로 전환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세계의 공평성을 실현한다. 나아가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사전규제는 철폐하거나 사후규제로 개편하되, 국민의 안전이나 건전한 경제질서를 보호하는 규제는 강화한다는 것이다.

1) 대한민국 정부,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1998, p. 29.

둘째,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히 퇴출시키되,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자본시장을 기업자금의 주요 공급원으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

셋째,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확대할 것이며, 계열사 사이의 상호지급보증 관행을 해소하고 핵심업종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의 부채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침체에도 끄떡없는 강한 기업을 만든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은 원활히 퇴출되도록 한다.

넷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며, 그 결과 경제 전체가 활력을 되찾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구조조정 중 불

가파하게 발생하는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실업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우리의 경제체제를 개방경제체제로 시급히 전환시켜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한다. 또한 개방경쟁 하에서 무한경쟁을 촉진시켜 부정부패,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배양되었던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간다.

이상에서 살펴 본 DJ 노믹스의 구체적 내용은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²⁾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바탕을 두고 있다. DJ 노믹스의 경제철학을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으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구조변화에 따른 장기침체의 상황에 대응하여 나타난 선전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 대내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의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논리의 무차별적 적용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혁신과

- 2)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는 독일의 프赖이부르크(Freiburg)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한 학설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한권 보호에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고 치안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유방임주의에 비해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지만, 재정운영을 통한 충수요 조절을 정당화하는 케인즈 이론이나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복지주주의를 확대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지는 않는다.
- 3) 신자유주의에 대한 김대현, “세계화 시대의 국민경제: 한국경제와 관련하여”(“세계화의 정치경제학”,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원 정치경제연구부, 1998)의 이와 같은 파악은 김진철, “세계화 정치경제학의 본질”(같은 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핵심부경화가 1970년대에 위기에 불러왔을 때 이를 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진단하여, 케인즈주의와 연합한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사상, 평등의 개념을 함께 폐기하고 대신 시장원칙의 강점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1970년대 이래의 불평등을 타개하기 위한 자본의 세계화으로서 시장의 자유를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질서로 간주하여 시장의 자유가 개인에게 공동의 반영을 가져다준다는 이념이다.

진보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효율이 제고됨으로써 사회적 후생이 증대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³⁾

따라서 DJ 노믹스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질서가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일에 제한하고 있다. 이는 사실 상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노믹스의 비판적 검토

1) 형평과 자립의 배제

신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DJ 노믹스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강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형평과 자립의 문제를 배제하고 있다. 즉 DJ 노믹스는 정치에 시장경제의 원리인 효율성의 도입을 강조하지만 경제에 민주주의의 원리를 도입하는 '경제 민주화'는 고려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⁴⁾

더욱이 민주주의가 1인 1표를 내용으로 하는 반면 시장경제는 보유된 주식수에 의한 권리행사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와 병행발전하기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제도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선진국가에 유효한 정책이 반드시 상이한 조건에 처한 개도국에게 마찬가지로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민주적 통제가 불가피하다.

한편 경제적 자유주의는 각국의 제도적 차이, 다양한 역사적 배경, 자유주의적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개별 국가의 경제문제에 대한 전지전능의 치유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제도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선진국가에 유효한 정책이 반드시 상이한 조건에 처한 개도국에게 마찬가지로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유화 (Liberalization)는 개도국에 있어서 제도개혁에 의한 일종의 전략적 수단이지 그 자체로서 개혁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유화의 정도와 형태는 개별 국가가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달라져야만 하고, 선진국과의 경쟁관계에서 우리는 국민경제의 자립을 중요한 가치전제로 삼아야 한다.

2) 재벌개혁의 후퇴

재벌기업에 의한 소유집중 및 재벌총수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구조는 우리 사회에 비효율과 불평등을 초래한 가장 주

4) 이제민,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 진단과 구조조정 방향」, 『한국경제와 DJ노믹스』, 정책토론회 자료, 1998, pp. 39-43.

된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재벌개혁(재벌체제의 해체)이라는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DJ 노믹스에 나타난 정부의 재벌개혁의지는 매우 회피한 설정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하여서는 비서실 폐지, 사외이사제 도입,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상호지급보증 금지, 과대채무 지급이자 손금산입부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동시에 이러한 개혁조치에 역행하는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다.

첫째, 1998년 2월 15일자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적용되던 출자총액제한이 철폐되었다. 동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재벌그룹에서 사업지주회사역할을 해온 회사들은 총자산의 50%만 넘지 않으면 완전히 자유롭게 계열사에 대한 추가출자를 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집중억제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지주회사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순수지주회사의 허용은 사업지주회사의 전면허용과 함께 재벌로 하여금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를 병용하는 방식에 따라 출자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여 선단식 경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1998년 6월 15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 (5% 미만)하거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더라도 1위 또는

2위와의 격차가 큰 경우엔 예외적으로 인수 및 합병 (M&A)을 허용키로 하는 등 기존의 기업결합심사 기준에서 크게 후퇴하였다. 넷째, 협행 공정거래법은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의 유형으로서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와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개정을 통해서 임원겸임과 1개 회사 또는 1개 기업집단 단독의 회사 설립을 규제대상 기업결합의 유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재벌의 시중은행 소유허용의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시장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적대적 M&A를 통한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을 허용함으로써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김대중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자 동시에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목표가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와 전문화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의 증가에 있다면 재벌체제 자체는 해체되는 방향으로 정체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DJ 노믹스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노동투입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제, 시간제 취업, 재택근무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개혁과 고통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은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그 결과 거시적 긴축정책과 미시적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노동자는 대량실업을 강요받고, 실질임금의 삭감, 노동강도의 강화 등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는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분출을 제도적 틀 내에서 해소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통제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및 체불임금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유지, 고용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 보호로 구성된 실업문제종합대책(1998

년 3월)과,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1998년 7월 시행)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극적 노동정책은 고용 및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는 노동자의 경영참与를 통한 기업의 투명성 및 생산성 제고, 노

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전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을 단행해야 한다.

4) 민영화 이후의 지배구조와 규제

정부는 1, 2차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하여 총 55개 대상 기관 가운데 40개는 민영화하고, 6개는 통폐합하며, 8개는 자회사로 존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의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재벌에 의해 경제가 지배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소유 및 지배구조, 그에 따른 사후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가상적인 지배구조는 재벌에 의한 소유,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 그리고 전문경영인체제의 도입이 제시되고 있지만 각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첫

체, 민영화된 공기업이 재벌의 계열기업이 되는 경우, 민영화된 공기업이 완벽한 소유자 지배기업으로 귀착되어 경제력집 중이 심화되고, 공기업이 보유한 원래의 공공성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국민경제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둘째, 외국인에 의해서 공기업이 소유되는 경우, 외자가 유치되고 외국의 선진경영기법이 도입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국가의 주요기간산업이 외국인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국부가 외국으로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셋째, 공기업의 주식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된 경우, 특정 대주주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는 불가능해지고 전문경영인체제가 도입될 수 있지만 분산된 주주가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소위 주인(principal) - 대리인(agent)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가능한 지배구조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경우는 재벌에 의한 공기업의 소유 및 지배이다. 이비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벌의 전단식 경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유구조가 우리 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원인이었기 때문에 재벌에 의한 공기업의 지배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반면에 전문경영인체제의 도입에 의한 공기업의 민영화방식은 비록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기업의 지배구조가 문제시되는 우리 사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기업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민영화 이후 규제의 문제는 시장구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하다. 민영화의 목표는 정부규제를 시장경쟁으로 대체함으로써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즉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활동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생산효율과 자원배분의 효율이 증대되고 그 결과 사회후생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산업의 시장구조가 독점적일 경우에는 민영화 이후 정부에 의한 규제가 불가피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민영화의 추진과 더불어 사후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5) 세제 및 정부개혁의 불충분

김대중 정부는 성과주의에 입각한 예산지출과 공평한 조세부담을 정부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세제개혁이 매우 미흡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세입의 측면에서 개인소득세 및 재산세의 비중이 낮고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아 세제의 소득분배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전제적으로 세입구조를 역전적 성격을 갖는 간접세 위주에서 직접세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

향으로의 개혁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성격의 세제개혁은

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제의 부활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화를 맞이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요구되며, 자

산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재산관련 세제의 최저세율은 인하하되 최고세율은 인상하여야 한다.

② 우리 나라의 상속세법은 외형상으로는 높은 명목세율과 낮은 공제액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비실명제가 제도적으로 용인됨으로써 세원의 포착이 원천적으로 힘들어 효력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포괄주의로의 전환이 요구된다.셋째,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고 근로소득세율을 인하하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세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생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사치성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여야 한다.

③ 우리 나라의 조세구조는 세출의 측면에서 정부최종소비재 가운데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보건, 의료 및 사회보장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나 절

문제의 어려움은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이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정치개혁은 재벌의 정치자리를 초래하고, 재벌개혁은 정치개혁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고실업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국방예산을 감축시키고 동시에 사회복지 예산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지출구조를 개편시켜야 한다. 특히 재정수입의 감소와 예상되는 복지비용의 증대에 직면하여 정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

부부처의 예산지출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합리적인 관료제사회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써 책임자의 채용, 업무의 성과에 따른 승진체계,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 등이 제시될 수 있다.

4. 맺음말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위기의 극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DJ 노믹스는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을 부실기업에 의한 시장경제체제의 불완전성에서 찾고,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을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과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정부주도의 압축성장과정을 통하여 재벌의 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증대되었으며, 각종의 규제와 지원정책을 수단으로 정부부문 또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소위 정경유착과 그로 인한 경제의 총체적 부실은 바로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임태된 재벌과 정치권력 및 관료들의 공존을 위한 산물이었다.

따라서 정치개혁과 재벌개혁 이외에는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근본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시장경제의 확대는 위기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처방책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치유책은 될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어려움은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이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정치개혁은 재벌의 정치지배를 초래하고, 재벌개혁은 정치개혁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구조개혁의 난관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근로대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단계 노동조합운동의 방향은 노동자의 경영참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같은 조합주의적 운동을 뛰어넘는 재벌개혁과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한국 경제의 위기가 국제금융자본의 조직적인 개입과 그로 인한 아시아 경제의 침체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면, 이에 대응한 아시아 경제권의 구축과 노동조합의 연합 전선도 장기적인 노동조합운동의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

참고한 글들

- 김대환, 「한국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 방안에 관한 일 연구」, 『경상논집』, 제12집 제1호,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8.
- 김대환, 「영국의 민영화 기업 규제」, 한국경제 연구원, 1994.
- 김소영, 「근로시간 단축의 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 대한민국 정부,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1998.
- 유경준, 「근로시간단축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이진순,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정개편」, 『경제민주화의 길』, 비봉출판사, 1992.
- 최정표, 「포항제철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공기업의 민영화와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한국경제학회 정책심포지움, 1998.
- Banuri, G. (ed.), Economic Liberalization: No Panacea -The Experiences of Latin America and Asia, Clarendon Press, Oxford, 1991 참조.
- Jin Ho Yoon, 'Globalisation and Working Time in Korea', IMF World Conference on Working Time, 1997. .
- Levi, Margaret and Richard Sherman, "Rational Compliance with Rationalized Bureaucracy." In Christopher Clague, ed., 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Christopher Clague,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참조.